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4
VOL. 677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발걸음을 맞춰 걷는 길.
그 길에 국민과 함께 해서
이 봄이 더 아름답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April
Vol. 677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4월 3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홍형선 위원장(사무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법제실장)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김형진 간사(공보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한주연(보좌관), 윤희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04 지금 국회에서는

- 김진표 국회의장,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공식 방문
-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접견
-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개최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

13 특집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안전 목표 달성할 것
_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과도한 처벌 수준, 불명확한 내용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_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과 안전 문화 정착 위한 노사 협력 필요
_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회의 입법동향 _김익두 법사위 행정실장

22 위원장에게 듣는다 _운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재무건전성 지킬 것"

24 길에서 길을 찾다 _김미애 의원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시작되는 곳 부산 해운대구

28 의원의 좌우명 _신영대 의원

'유지경성' (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뤄낸다)

30 칭찬합시다 _박덕흠 의원

서삼석 의원이 박덕흠 의원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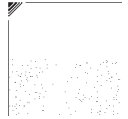
3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민홍철 의원

서민의 행복을 만드는 따뜻한 정치

3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인구위기 대응,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CONTENTS



22



24



28



30



32

43 국회의 꽃과 나무 이야기
영춘화

44 의회외교 포커스
2030부산세계박람회,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 될 것
_박재호 위원장

46 함께하는 국회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48 법률, 시대를 읽다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
_고상근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50 주재관 리포트
캘리포니아의 경제 상황과 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 입법 동향
_장영한 LA 주재관

53 이달의 청원

54 위원회는 지금
국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 실시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의안 의결

58 국회 뉴스

62 법 시행 그 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64 새 법률 소개
국회, 두 차례 본회의 열고 법률안 113건 의결

68 만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70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블록체인'이 촉발한 변화 _김동철 박사

72 국회 사람들
그린피스 활동가가 국회에서 일하게 된 까닭은?
_예윤해 비서관

74 이달의 서평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_김준희 책임연구원

76 고전에서 읽는 지혜
토지제도·과거제도 개혁을 담은 '반계수록'
_박석무 석좌교수

78 국회 미술관
전통과 현대를 잇는 20세기 미술의 역사적 선물
_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81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82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_신연희 속기사무관

84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북한산 비봉능선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88 생활 속 우리말글
영어를 권하는 사회 _김풍기 교수

90 정치 관련 주요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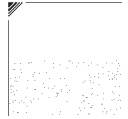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 튀르키예·이탈리아· 이스라엘 공식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3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므타 국회의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방문해 각국 의회 정상과 정치 수반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공동대처,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교류,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 및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다. 또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은 물론 교민사회의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 다양한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 가운데)이 3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회의장에서 무스타파 쉐네토티르키에 국회의장(오른쪽 가운데)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지진피해 위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므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이 공동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김 의장은 최근 대지진으로 유례없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국민과 한국 동포들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은 물론 외교부, 재외동포청과 협의해 교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과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

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단독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 발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범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무스타파 쉐네토티르키에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 회복에 대비해 양국 간 항공편 증설과 교역·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최근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최근 ‘알타이 전차’(튀르키예 차세대 전차)에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및 주요 부품의 양산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대표단이 3월 13일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홍기원·강병원·이은주·전혜숙 의원, 파롤린 국무원장, 김 의장, 오현주 주 교황청대사, 이장섭·권철승 의원, 조경호 의장 정무수석, 호지츠 교황청 외교부국장)

앞으로 군 수송기, 무인기 등 분야에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튀르키예에는 2천700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양국 간 교역 및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교민들의 거주허가증 및 노동허가증 발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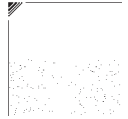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항공우주 MOU 등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13일 이탈리아로 이동해 유홍식 추기경과 환담했으며 다음날인 3월 14일 오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 방안,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두 환담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미사와 성베드로대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교황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3월 14일 오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방안, 경제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내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3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몬테치토리오 궁전(하원)에서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3월 15일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를 방문, 아미르 오히나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임을 잘 알고 있다.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영화, K-POP 등에 있어서 한국은 문화강국이다. 문화와 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과학기술 협력 등 논의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15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에서 아미르 오히나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며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히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한국은 첨단기술을 가진 파워국가이고 이스라엘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나 환영한다”고 답했다.

오히나 의장과의 면담 후 김 의장은 히브리대학으로 이동해 이곳에서 위탁 교육 중인 ‘탈피오트(Talpiot)’ 대원들과 만나 부대 운영 과정 및 창의력 학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3월 16일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에 총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습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 첨단과학기술군 양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탈피오트 관계자로부터 교육, 훈련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어 김 의장은 3월 16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야드 바셈’을 방문해 헌화하고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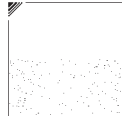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UN 비상임이사국 진출 및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16일 모하메드 쉬타에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에 지지를 요청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부탁했다.

쉬타에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쉬타에 총리는 양국간 조인트 벤처, 공동투자 및 경험, AI 등 첨단기술 분야 인력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한국은 평화 애호국으로 팔-이 문제에 있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책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부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부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20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님께서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했을 때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 “비례성·대표성 강화로 협치 제도화해 국민 불신 벗어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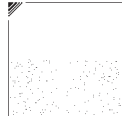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을 국회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

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진표 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



획을 언론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먼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3~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됐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

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



이광재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2023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총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2023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광재 총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분야에서 보츠와나, 오만, 짐바브웨,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와 함께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이광재 총장은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 협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기후 위기, 도시화, 인간의 기대수명 증가, 디지털화 등 다양한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지식 공유, 정보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한 실천 사례로 우리 국회가 도입하고 있는 AI 의정 지원 시스템인 국회도서관 ‘아르고스(argos)’,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인터넷 회의 중계 시 AI음성 인식 자막 제공 서비스, 국민동의 청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세미나 실시간 중계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또한,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민과 세계시민이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전세계 의회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광재 총장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사무총장들과 연쇄적인 면담을 통해 의회사무처 차원의 실무적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 사무총장과의 동시 다자회담에서는 금년 6월 1일 우리나라 제주 포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통해 한·아세안 의회 간 협력이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

특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산업안전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대한 점검과
보완 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안전 목표 달성할 것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과도한 처벌 수준, 불명확한 내용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과 안전 문화 정착 위한 노사 협력 필요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회의 입법동향

김익두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장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안전 목표 달성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종사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기업의 의무로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개선 여부를 점검 및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작업중지, 종사자 등의 대피, 추가적인 피해방지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한편, 도급·용역·위탁 시에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과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4만 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큰 관심을 받았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사회 전반에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점, 기업 차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고용노동부



원에서 산업안전을 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켰다는 점 등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으로 2022년 644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에서 256명이 사망해 2021년보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 한편 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등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한 대형사고도 큰 폭으로 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전년대비 23명 증가한 53명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같은 처벌 회피를 위한 조치에 몰두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수사 상황 또한 녹록지 않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는지, 이러한 의무위반에 기인해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따져야 하는데, 고의성 및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영국에서도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인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실치사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안전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중대재해 감축 비결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그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산업안전의 대원칙을 현장에서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영국의 중대재해 감축 비결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기규율 예방과 엄중 책임’의 산업안전 가치를 천명했다. 그간 방대하고 세세한 규정을 통한 규제 방식에서 전환해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인 기업의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목표 의식을 갖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운영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예방 노력이 중대재해의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재 방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등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간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 달성을 위해 제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

과도한 처벌 수준, 불명확한 내용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지금까지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과 실효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고사망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50인·50억 원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의 효과를 단정하는 것이 이르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법인 처벌을 강화하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제정(2007년) 이후 사망자 감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처벌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사실 법 시행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투자 확대 및 조직 강화 등 안전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모호한 의무규정과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는 법률규정을 지키고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업장에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면책되느냐는 구체적 질문들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불안감에 편승한 로펌의 법률컨설팅 시장만 활성화되고, 현장의 산재예방활동에 집중해야 할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이 오히려 법률대응에 분산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법률이 완성도 있게 제정됐더라면 이러한 논란과 부작용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처벌규정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법조문 규정이 매우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대상(이에 준하는 자), 안전보건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등 논란이 되는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정합성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조항 간 체계성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 수사 과정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중대재해 위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자의적 법 집행, 과도한 자료요구, 피의자 권리 침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사업장 안전인력들이 수사대응으로 본연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행정력이 사고 후 사후 수사와 처벌에 집중되다 보니 사전적인 예방 정책추진과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미이행으로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대부분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현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많은 기업이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고 산재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처벌 수준이나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

고 법률 체계성이나 산재예방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향이다. 당장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적절한 수준의 경계별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 및 기소를 받고있는 문제점도 개선돼야 하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와 원·하청 관계에서의 책임범위도 구체화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의 정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 달성 한계

특히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어진 여건에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무내용을 단순화, 명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시기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 처벌위주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안전역량을 키우고 안전산업의 육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도 지난해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기존 규제·처벌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하루속히 합리적으로 법률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과 안전 문화 정착 위한 노사 협력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00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고, 노동자들이 토사 붕괴사고, 추락사고, 폭발사고,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로 죽고 다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공통적으로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 미흡과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 시행된 지 겨우 400일 갓 넘는 법에 대해 산업재해 감소 효과 없이 현장의 혼란만 심화하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부정적인 입장만 내세우며 법 자체를 되돌리려고만 했다. 정부는 그런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사이 중대재해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고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침만 요란하다. 모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이나 비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에 집중할 때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



김광일 본부장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악 시도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위해 정부 지원 필요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계 전반에서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전 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도 정부의 뚜렷한 대비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확대해 중소기업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에서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경영책임자에게 면책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댈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 집행과 더불어 기업의 산재예방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관된 입장으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를 시도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행하겠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들인 분명한 개악 시도다.

끝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 확대 등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노동자도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대립적 노사관계 틀에서 탈피해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교육, 홍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 경영책임자 정의를 바로 잡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며, 위험한 작업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회의 입법동향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는 제3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원안의결했고, 이 의결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로 공포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됐다.

이 글은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회의 입법동향에 대해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언급한 후 현재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에 관해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유사한 제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했는데, 이는 종래 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주로 단위 사업장의 책임자나 실무자 대상으로만 형사처벌이 이뤄져 온 탓에 사고의 실질적 예방 및 억지가 미흡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소관 위원회인 제21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법 제정 후 현재(2023년 3월 8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건(철회 1건 제외)이다. 먼저,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시행(2022년 1월 27일) 전에 발의된 법률안은 5건, 시행 후 현재



김익두 행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5건이다. 다음으로, 심사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발의법률안 중 3건은 제21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고, 그 외 7건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또한, 발의법률안들의 개정 사항을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강화·추가하는 경우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로는 ①이 법 정의 규정 중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등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포함되는 자(직업교육훈련생 등)를 추가하며, 책임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②중대시민재해 발생장소 및 보호법익을 추가하는 사항 ③적용 제외 사업장 기준(5명 미만)을 삭제하거나 조정하는 내용 ④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려는 사항 ⑤의무위반에 따른 중대재해발생 시 조사 결과 확인된 구조적·기술적 원인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 ⑥위반행위시 부과될 수 있는 법정형(양벌규정 포함)의 상한을 올리거나, 대신 하한을 규정하는 형태로 변경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하한을 도입하거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부과하려는 내용 ⑦개인사업자 및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부칙 개정 사항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법 제정 전 발의되었던 법률안(총 5건) 등에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사항을 이 법에 반영하려는 경우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①사업주

등의 위반 사실 확인 이력 또는 사고 관련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법률상 추정하려는 내용 ②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죄를 범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가중해 처벌하려는 사항 ③이 법에 따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려는 내용 ④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를 명하도록 하는 사항 ⑤유죄 선고와 형 선고 기일을 분리하고, 국민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원이 형 선고를 하도록 하는 양형 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절차 등을 도입하는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①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험한 사업장의 경우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사항 ②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 ③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 ④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내용 등이 있다.

이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및 현재 발의돼 있는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및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봤다. 향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모든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신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장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재무건전성 지킬 것”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경상남도 양산시갑)



Q.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대한 소개와 위원 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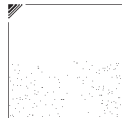
A. 기재위는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재원의 효율
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견제
하는 곳입니다.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
한 제도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서의 최대 화두는 높은 복지수준 유지와
적은 조세부담, 낮은 국가채무 수준이라는 세 가지 목표
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재정 트릴레마(Trilemma)’
의 문제입니다.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
해서는 조세부담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국가채무를 증
가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라는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건실
한 경제성장으로 재정 트릴레마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경제성장은 경제 규모 및 재정수입의 자연 증가
로 이어지고 국가 채무 증가없이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기 재정문제로 조세부담을 올리는 것은 경제
활력 제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산업 자본이 외국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수출 주도 국가에서 기업·수출경쟁
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민생·경제 현안들을 책임져야 하는 기재위 위원장으
로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



편, 국가 재정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는 ‘재정 트리니티(Trinity)’를 달성하겠습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기재위가 거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대선 이후 국정운영의 기조가 큰 틀에서 바뀌었고, 기재위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 세제, 경제정책 방향 등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전환 중입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부동산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유동성 문제로 단기에 주택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단기 가격 급등락에 맞추어 부동산 가격 조절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불합리한 과세로, 이를 정상화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으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시급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기재위 여야 위원님들의 원활한 합의로 적기에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Q. 올해 기재위의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2023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천8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1천700조 원이 넘는 기업부채로 가계와 기업들이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고도 발전단계에 이름에 따라 과거 고도 성장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의 문제입니다. 현재 기업 활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으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

는데, 이와 함께 우리 주력 산업인 원전, 최근의 방위산업, 제약·바이오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기조로 재정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정당은 언제든 무분별한 재정확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현재 여당이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법제화이기 때문에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생산적 복지를 확대하거나 저소득층·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세제를 확대해 하위층의 소득과 자산을 높여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Q. 위원장님의 정치철학과 여야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경제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 등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사회 ‘과학’의 영역이고 냉철한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신중히 집행해야 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직시하되 차가운 머리로 이에 접근하고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를 갖는 것이 기재위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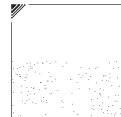
저희 기재위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지난 했던 코로나19와 복합 글로벌 경제위기에 여야를 떠나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철학과 관점 차이의 문제로 모든 안전에 대해 단기에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탄없는 토론·설득이 열리는 기재위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글 고영선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시작되는 곳 부산 해운대구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4월 어느 날, 부산에서는 유난히 더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졌다. 파란 하늘 아래 만개한 꽃들을 보며 문득 오늘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짝 핀 꽃만큼이나 반가운 미소로 취재진을 맞이한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을) 지역은 장산과 수영강, 해운대수목원 등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첨단산업혁신도시가 계획된 매력적인 도시”라고 소개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부산에는 수영강이 있다. 수영강은 부산의 도심을 흐르는 대표적 인 하천으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자 3개의 교량과 APEC 나루공원 수변로와 이어져 수많은 부산시민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부산의 대표적 명소다.

김미애 의원은 수영강변 산책로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이날은 김 의원이 시민들과 수영강변 플로깅을 하는 날이라고 했다. “플로깅’이 무슨 뜻이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한다는 뜻인데 운동하면서 친환경 실천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의미가 있죠. 지역구민들과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는 활동인데 오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면서 부산시민, 그리고 저희 당협위원회 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국가하천답게 수영강변을 따라 훌륭한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고질적인 범람 위험이 있어 장마시기가 오면 매년 걱정이 되는데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이 첨단산업단지로

김미애 의원과 해운대구 석대동에 위치한 반여농산물시장역 옥상으로 이동했다. 옥상에 오르자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대 약 58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이 펼쳐졌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김 의원 지역구 최대 현안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첫 번째 공약이었다. 그는 센텀2지구 개발 착수를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부산시 등을 찾아다니며 심의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2021년에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한 2022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 등을 통과해 올해 1차 착공을 앞두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향후 센텀2지구는 동남권 ICT지식산업 수요를 충족하는 세계적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로 ICT, 지식서비스 산업,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융합부품소재 등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중심타운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영강변 플로깅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

“많은 분들이 ‘해운대’라고 하면 세계적인 관광도시,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떠올리지만 마린시티처럼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선 해운대(갑) 쪽이 해당되는 곳이지요. 제 지역구인 반송동, 반여동 등 해운대(을) 지역은 1970년대 부산시 도심개발로 인해 철거민과 수재민이 이주하며 조성된 정책이주단지로서,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1985년 여공으로 취직해 일하던 방직공장 터인데,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가 들어선 것 말고는 크게 변화된 게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변신, 해운대수목원

쓰레기 매립장이 부산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2021년 문을 연 부산 해운대수목원 이야기다. 해운대구 석대동에 위치한 해운대수목원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악취와

유해가스로 인한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009년 산림청의 수목원 타당성 심사를 거쳐 2010년 2월 수목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일부구간을 조성해 2021년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다. 약 19만평 부지의 해운대수목원은 느티나무를 비롯한 634종의 수목 19만 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지난해 200여 중 5만여 본의 장미로 꾸며진 장미원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 받았다. 특히 울타리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양떼목장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주말마다 ‘어디로 가지?’가 항상 고민거리였다”며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부산시민이 집 가까이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내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해운대수목원은 부산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힐링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직도 수목원 아래 40미터 지하에는 쓰레기가 묻혀 있지만 오랜 시간 고통 받은 지역민을 위해 좋은 흙을 붓고, 꽃과 나무를 심고, 생태연못도 만들어 아름다운 수목원으로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



해운대수목원 양떼목장에서

게 된 것이지요.”

여공출신 변호사가 이루고 싶은 꿈

김 의원은 14세가 되던 해 암투병중이었던 어머니를 여의고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지금의 지역구에 위치한 방직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했고, 판매원, 식당 종업원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배움의 갈망이 있던 20대 후반,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해 5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800여 건의 국선변호를 맡았다.

결혼한 적도 없고, 배 아파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지만 김미애 의원은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첫째는 둘째 언니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할 무렵 데려온 조카이고 둘째는 큰언니의 딸이다. 그리고 2011년 마치 인연이었던 것처럼 이끌어 막내를 입양했다. 김미애 의원은 “세 아이 모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아이들과 관련된 활

동에 앞장섰다. 가난한 소년뿐만 아니라 소년범 아이들까지 도맡아 변호했다. 제20대국회에 들어와서는 가장 먼저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도입을 골자로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 도입으로 한 해 600여 명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으로 밖에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가장 약자인데 버려지거나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정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꿈꾼다”는 김미애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진심을 다해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작게는 주민과 함께 행복한 환경 만들기,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의 책무, 지역대표로서의 역할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부산: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유지경성’ (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뤄낸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신영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경기도 교육감 비서관을 거쳐 제21대국회에 입성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뤄낸다)이 인생 좌우명이라는 신영대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신영대 의원은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됐을 때 감옥에서 많은 책을 읽었다”며 “그 중 후한시대 역사서인 ‘후한서’를 접하면서 유지경성의 의미가 새삼 스레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후한의 광무제 유수는 부하인 경엄이 전투에 나가 열세에도 불구하고 악전고투 끝에 적을 섬멸하고 승리한 일을 두고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뤄낸다(有志竟成)’고 말하며 경엄의 용맹함을 칭찬했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뜻이 확고하다면 일을 이루고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또 정치에 도전하면서, 그리고 그 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결국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는 것을 경험하며 유지경성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범생이’로 불렸다는 신 의원은 취업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을 걷던 그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실상을 접하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군 복무 후에도



‘국가와 지역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군산에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청년 조직을 만들어 사무국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고(故) 김근태 의장 중심으로 결성된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군산지부의 정책 위원장도 역임했다. 그러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의기투합했던 한병도 의원이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보좌관 자리를 제안해 국회에 첫발을 들였다. 그 후 2007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제19대국회에서 전해철 의원 보좌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9시 등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일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7시 30분까지 등교하느라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피곤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9시 등교’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정 교육감 당선 후에도 학부모들과 교원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경기도내 전체 교육청을 돌면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했습니다. 이후 ‘9시 등교’ 정책이 자리 잡으면서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정책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국회 입성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업,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관련 의정활동을 해 온 신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도

의 실적이 0건’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중소기업의 15년 숙원과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현실에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국감에서 밝혀낸 후 지난해 중소기업법안소위 위원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GM대우 군산공장 철수로 지역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강소특구로 지정되도록 해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강소특구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단점을 보완해 소규모, 고밀도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저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이 되자마자 군산시에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소특구 유치에 힘을 쏟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소득을 늘리고, 향후 10년, 20년 뒤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이자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 또 산업도시 군산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산업과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금융, 판로, 수출 등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이 박덕흠 의원을 칭찬합니다



“여야 아우르는 리더십과 포용력을 지닌 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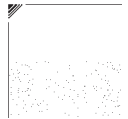
4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박덕흠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 신안군)은 “여야를 아우르는 리더십과 남다른 포용력으로 여야 간의 정쟁도 줄일 수 있는 분으로 항상 연륜 있는 말씀과 행동에 감동도 받고 배움도 얻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서 의원님과는 농촌을 지역구로 둔 공통점이 있어서 농촌 발전과 지역 균형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는 편이다. 말에 그 사람의 성품이 묻어난다고 믿는데, 서 의원과 대화를 하다 보면 훌륭한 성품과 인성을 갖고 계시다고 느낀 적이 많다. 그런 분께 칭찬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기업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다. 2012년 제19대국회에 입문하기 전까지 건설사를 운영하고 4만여 회원사를 둔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지냈다.

주변에서는 사업에 성공한 정치인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사업을 일궈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서울에 홀로 상경해 반지하방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번

의 실패도 겪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고향 충북 옥천, 또 충북 동남부 4군 출신으로서 기댈 언덕이 없다는 것이었다.

“너무 힘들 때 막연하게 기댈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다 내가 고향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



니다. 또 건설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형건설업체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거래 협약을 실천하는 등의 성과는 거뒀지만 회장으로서 업무 범위의 한계를 느꼈고, 건설업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되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실감했지요.”

“올바른 정치는 항상 국민에게 배우죠”

흔히 농촌이라고 불리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농가의 경영 부담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 역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가 가장 보람된다고 활짝 웃었다.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최근 지역구 4개군 가운데 하나인 옥천군의 청성면과 청산면 파출소가 인력 재배치를 이유로 통폐합 계획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충북경찰청의 기존 통폐합 계획이 철회되고 지역구민들이 이제는 마음 놓았으며 너무나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저 역시 너무나 보람된 일이었지요.”

박덕흠 의원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적 논리와 적은 인구를 이유로 농촌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많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정부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은 임기 동안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군 지역 중 소멸위험지수 등 일정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특례군으로 지정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고향세법(지방세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올해부터 전국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는데, 그 기부제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동네 이장님보다 더 친숙한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주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인삼이나 한우 가격 폭락으로 폐업위기까지 간 농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회생자금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상 올바른 정치는 국민에게 배운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화성시을)을 추천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가 지난 제20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였을 때 여당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간사는 정당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양쪽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당시 상임위장 안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예산,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면서도 회의장을 벗어나면 야당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셔서 고마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서민의 행복을 만드는 따뜻한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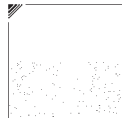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김해시갑)

군 법무관으로 육군 준장(장군)을 지낸 민홍철 의원은 24년 넘게 군에 몸담았다. 군판사, 법무참모를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뒤 예편한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19대국회에 입성했고 제21대총선에서도 승리해 경남 유일의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 됐다. “한발 한발 신중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홍철 의원을 만났다.

경남 김해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민홍철 의원은 고철을 주위 고물상에 팔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갔다. 집안 사정을 생각해 인문계 대신 공고에 진학하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선생님의 만류로 인문계인 김해고에 3년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학업뿐만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으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던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고교 2학년 때 모친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 주변에서는 서울의 명문대를 권했지만 동생들을 두고 떠나는 게 내키지 않아 부산대 법학과에 입학한다.

그는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



무관으로 임관해 각급 부대 검찰관과 군판사, 법무참모를 거쳐 20여 년 만에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군 법무관으로는 드물게 장군이 된 것이다. 그 후 그는 육군본부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하고 2008년 전역해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 말 연로한 부친을 모시기 위해 고향 김해로 돌아왔다. 홀로 5남매를 키워주신 분이였다. 김해에 낸 그의 변호사사무소에는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접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사연은 민홍철 의원이 3선을 지내는 동안 많은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2012년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받았다. 결국 그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당시 경남 유일의 민주통합당 소속 당선자였다. 그는 당선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참배를 했다고 한다.

2016년 제20대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기지 않겠냐는 권유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신의가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이후 같은 해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출생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보수적인 지역이기도 하지요. 저는 군 출신 중도개혁파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보아 온 지역 선배들, 이웃들이 ‘저놈아는 어디 가 있어도 믿는다’고 응원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24시간 공인(公人)인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은 3선인 지금도 매주 아내와 함께 김해를 찾는다.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이라도 놓칠세라 잠들

때도 휴대폰을 켜놓는다. 그는 “국회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최후의 민원’을 갖고 온다”고 했다.

“구청, 시청, 법원 여기저기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봐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입니다. 하다하다 안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의원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한 전화 한 통,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출신인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수차례 “국방 안보에는 너와 나,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

“국방위에선 여야 함께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은 1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국방위원장 시절, 방위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입법을 하는데 주력했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진 민홍철 의원은 입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주로 하는 인기영합적인 입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사회적 이슈 물이보다는 정책적인 개선이 시급한 사안 위주로 지적하고 질의한다. 행정부에서도 ‘민홍철 의원이 지적한 건 그럴 만하다’고 할 정도”라고 밝혔다.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남긴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정치는 행정과는 달리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딱딱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서민의 행복을 만드는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인구위기 대응,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3월 2일 의원회관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저출생 문제의 해법과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위기대책위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1차 토론회로, 인구 변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봤다.

토론회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인구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밖에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초저출생 극복과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고령사회 극복과 대응을 위한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인구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 토론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3월 6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성규 가천대 교수가 ‘중소기업-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는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부상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10인 이하의 n차 협력업체에 초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원·하청기업이 나아가야 할 상생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 이준원 숭실대 교수,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남규 안전컨설팅전문가 등이 참여해 원·하청 안전 상생협력을 위한 주체별 역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향, 산업안전보건계 소통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전해철·강병원·권칠승·김종민·서동용·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배·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3월 7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분산에너지로서의 연료전지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기화 수요 증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분산전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추진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친환경·지역균형 형태의 분산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홍중 단국대 교수는 ‘분산전원 활성을 위한 정책 및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연구실장은 ‘분산전원으로서 연료전지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상무는 도심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 자소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에 공감하며, 에너지 부하 집중 지역에 분산 전원에 대한 지원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등 자가발전을 의무화해 지역별 수급 균형을 달성해야 하고, 이는 한전의 적자 감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3월 8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인재양

성만이 우리가 맞은 위기의 해법”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어깨가 무겁다”고 특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과학기술계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기술패권시대에 기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활발하게 특위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의 발제로 진행된 2부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계 고질적 문제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관 중심의 R&D 지원 문제, 인력 양성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다뤘다.

조승래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향후 특위를 통해 제안되는 여러 정책들을 상임위 활동에 적극 녹여내고, 정부 과학기술 정책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특위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한 특위에는 20여 명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3월 9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속도감 있는 정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소장은 자율주행차 개발현황 및 향후 과제를,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장이 자율주행기술 표준화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건수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최종찬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서재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PD가 자율주행기술 수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강화 및 국가표준 산업계 적용 방안 그리고 관련 입법과 제 등을 논의했다.

· 재외동포청 설립 환영대회 및 세계한인여성 정책 좌담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3월 10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환영대회 및 세계한인여성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6월 설립 예정인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축하 메시지와 재외동포들이 바라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는 박세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해 이효정 총재의 인사말, 조명희 의원의 환영사가 이어졌고, 각국 동포들도 영상축사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환영했다. 해외 동포들은 “750만 동포들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다양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제2부 정책 좌담회에서 이효정 총재는 기조발표를 통해 “모국 발전에 기여한 세계한인여성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계한인여성 정책 전담부서 설치, 차세대 육성, 귀환 동포 등 한인동포들의 관심사항을 강조했다.

이어 금종례 박사가 ‘재외동포 여성지위 향상과 역

할’을 주제로 이현주 차세대분과 캄보디아 지회장이 ‘기성세대와 차세대의 소통과 세대 극복’과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세영 세계한인여성협회 사무총장이 ‘귀환동포의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류 지원을 강조했다.

·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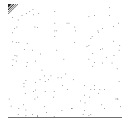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14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금융문맹률이 높고,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교육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발의 예정인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금융교육진흥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홍성국 의원이 맡았으며,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 회장은 “현재 고등학교에 금융 과목이 있지만 교사가 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해야 배울 수 있다”며 “금융을 일반사회의 한 분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의 확대와 함께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교사가 경제 관련 전문성이 낮을 경우 경제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온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도 “교사들의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교육 중 난이도가 높은 투자 관련 내용 교육 시에는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교육 전문 강사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2023.3.20)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교육진흥법’은 교육부 장관이 금융교육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가 금융교육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역할을 맡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홍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김민석·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기윤·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3월 16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들과 현장 운동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과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 장진우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동현 전 듀크대 교수, 이승엽 카톨릭대 교수, 장옥진 인제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마약 중독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국가적인 자원과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약물과 치료법, 매뉴얼, 해외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하고, 마약 중독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미국의 국립약물남용연구소와 같은 전문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3월 17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 또다른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다음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체계가 더욱 짜임새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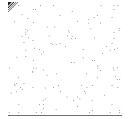
토론회 좌장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 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맡았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가 ‘감염병 위기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구축 및 의료인력 운용 방안’을,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병원 운영센터 센터장이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강화’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방지환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과장,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박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이 참여해 감염병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극적인 투자, 시의적절한 시스템 변경과 개선을 위한 유연한 환경 조성, 국가 방역정보시스템의 지자체 활용도 증대를 위한 노력 등 의료대응 체계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안내

(137건, 2.2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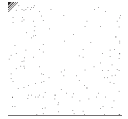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2.20(월)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보행자를 위한 도로 무엇이 문제인가	임호선, 전봉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김병욱(민), 김성환, 민병덕,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시대 IT서비스가 이끈다’ 국회세미나	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건설산업 OSC활성화방안 토론회	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21(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윤준병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디지털 소비자문제 이대로 둘건가?	하영제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제는 여성리더십, 2024 총선승리!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	이재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정책의 해법 : 노인주치의제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유경준 의원실,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2.22(수)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	권명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고려인 학생 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세미나	권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홍영표,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세계안보와 한일관계 개선 및 제언	윤호중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트레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준호, 김영선, 이달곤, 강기윤, 윤한홍,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23(목)	에너지 부분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김정호, 서삼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박성준, 강민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성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국제 지역환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희재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 제3회 한중 사회·문화 갈등의 상호 인식과 발전적 전망	홍영표,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23(목)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	김병기, 강준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고민정,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	김한정 의원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평화대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	임오경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2.23(목)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연속 교육토론회	서동용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	김성원, 윤한홍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제3회 과학기술 강국포럼 토론회	조승래, 김영식 의원실, 국회과학기술강국포럼	국회도서관 강당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2강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24(금)	유기물 재자원화 기술혁신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정성호, 신정훈, 김정호, 김영진, 최춘식, 오영환,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우원식, 이학영, 김영진, 이수진(비), 윤건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라·우 전쟁 1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이인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노령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홍문표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27(월)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	변재일,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2023 청소년정책 변화에 따른 국회토론회	김경만, 김한규,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	권철승, 김성원, 소병훈, 송옥주, 이소영, 이원욱, 이학영, 정성호, 최종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강득구, 강민정, 김민석, 도종환, 문정복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광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외교정책의 중요성을 논한다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서삼석, 김정호, 신정훈, 안호영, 서동용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김영배, 이명수, 최형두, 김종민, 이은주,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2.28(화)	한-파나마 경제 기회창출 세미나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금융기관 적극적 채무재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태년, 김경만, 김경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	소병훈, 이학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윤관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은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	김예지, 서정숙, 이종성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신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행정서비스 개혁 방안 공동 토론회	이달곤, 강기윤, 김영선, 정점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인 스타트업 기업에 답을 묻다	강민국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3.2(목)	2023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선감학원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입법 토론회	전해철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발전계약 최소화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박주민, 이동주, 김영주, 김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 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탄소중립 시대 한탄산업의 길을 묻다’ 국회 정책 토론회	안호영, 위성곤, 신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해운-조선-금융 상생 국회정책세미나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정책세미나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방사능 공포괴담의 진실과 과제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3.3(금)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	이상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박용진, 박성준, 소병철, 양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유치 국회포럼	강기윤, 김영선,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김두관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강선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3.6(월)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권성동,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은?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풍력산업계 설명회	김원이, 송기현,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택 의원실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이종배, 전해철, 강병원, 권철승, 김정재, 김종민, 서동용, 정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최영희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3.7(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서영석, 정춘숙, 강훈식, 고영인, 신현영, 이용빈, 최혜영, 최영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	이태규, 김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 주택 도입방안 모색	김상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지역아동센터 석면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이학영,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박주민, 김의겸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3.8(수)	국회부의장 김영주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2강 사회 국민연금제도와 개혁 논쟁'	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경제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전세사기·강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김병욱(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	이원욱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 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김영배, 박주민, 우원식, 정태호, 홍기원 의원실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3.9(목)	국회평화외교포럼 2023년 총회&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초청 강연회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강선우, 강득구, 고민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정진석,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23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이인영 의원실, 국회 한반도경제전략 연구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10(금)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재외동포청 설립 환영 대회 및 세계한인여성 정책 좌담회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소형원자로(SMR)산업 육성·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이재익 의원실, 국회 국가에너지정책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3.13(월)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최종 집담회	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반도체 산업 세금 감면이 정당?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3.14(화)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홍영표, 김진표, 홍익표, 김수홍,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홍성국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21회 농기자재 농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대학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 방안 모색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기동민,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김두관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기후위기시대, 국가유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강훈식, 성일종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3.14(화)	한국 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이은주, 강민정, 고민정, 고영인, 김남국, 김정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3강 정치 대한민국 헌법, 36년 된 철 지난 옷	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농업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위성곤, 김성환, 이소영, 장혜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15(수)	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을 위한 제언 '4차산업시대 에너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수진(비), 전해철, 노웅래, 전용기 의원실	국회박물관 강당
	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	김학용 의원실	한국폴리텍대학반도체융합캠퍼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홍철, 도종환, 김성주, 이정문, 김병욱(국)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새로운 꽃 문화 만들기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도읍,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방안 '아빠 육아 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강득구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전북 대통령지역공약 점검 토론회	김윤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3.16(목)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순환경제를 위한 침대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미향, 위성곤, 윤준병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강기윤, 서정숙, 김민석, 전해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수능은 어떻게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가	강민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 병무정책의 미래대응과 군인적자원개발 고도화 국회 정책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류성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3.17(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성과와 발전 방향	김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42경산 유치와 임당 유니콘파크를 통한 ICT경산 활성화 방안 제언 토론회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	최연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	정우택, 조응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산업 국회포럼	이현승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	하영제, 김정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박주민, 오기형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20(월)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분석·평가	김상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초연결시대, 디지털지적(地籍)의 미래상	김선교, 장철민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토권(STO)·가상자산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영춘화

봄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진 영춘화(迎春花)는 매화와 거의 같은 시기에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2~3주 정도 노란 꽃을 피워서 황매(黃梅)라고도 불립니다.

얼핏 보면 개나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개나리는 꽃잎이 네 갈래이고 영춘화는 여섯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나리보다 먼저 꽃이 피는 영춘화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키

2030부산세계박람회,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 될 것

1883년은 조선이 서방국가에 외교사절을 처음 보낸 해다. 미국을 공식방문한 민영익, 유길준 등은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기차를 타고 뉴욕에 도착해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을 예방했다. 사절단은 그 해 미국에서 열린 보스턴박람회장도 방문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서양권 박람회와 맺은 첫 번째 인연이다. 10년 뒤 우리나라는 미국 시카고박람회에 전시장을 마련해 관복·갓·짚신·생활용품·조총 등을 전시했다.

1893년 시카고박람회 참가 이후 137년만에 대한민국이 첫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이미 개최했던 1993년 대전박람회와 2012년 여수박람회는 인정엑스포(Recognized Expo)로, 일종의 비공식 엑스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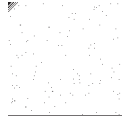
부산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세계 12번째 등록 엑스포 개최 국가가 되고, 아시아 네 번째 국가가 된다. 또 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국내적으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향후 20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가장 의미 있고, 중대한 국제행사가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세계박람회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현대 인류 문명의 발자취는 세계박람회와 함께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지구촌 산업과 문화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박람회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북항 일원에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개최될 것이다. 탈탄소 경제에 대한 비전과 첨단기술 분야의 획기적 대전환에 대한 비전을 공



박재호 위원장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남구을)



유하고, 나아가 이를 체험하는 세계적 기회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 2030세계박람회 유치 도전 국가는 한국의 부산을 비롯해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다. 경쟁국 중 일찍부터 유치활동을 개시하고 오일머니를 앞세워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는 사우디는 자국 언론을 통해 총 171개국 중 85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할 만큼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네옴시티, 허브공항, 인권개선 등을 앞세워 유치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작년 총선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권역별 특사 임명 등 유치활동을 본격화하면서 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평화와 지원을 호소하는 방식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전 세계에서 고르게 지지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2022년 중·후반부터 그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한 해에만 153개국에 대통령·장관 특사 등을 파견해 교섭활동을 전개하며 큰 성과를 거뒀었다. 올해도 3월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최태원 유치위원장 등이 유치 교섭을 위해 30여 개국을 누비고 있다. 특히 상공계의 유치활동 성과는 눈부시다.

4월 3일부터 BIE(세계박람회)기구의 부산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다. 실사단을 위해 부지 시찰은 물론이고 네 번의 주요한 프레젠테이션과 문화체험 행사, 시민 환영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11월 유치국 결정 이전에 가장 중요한 유치 준비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겐 국민적 기대와 열정을 보여주는 ‘부산 실사’가 필요하다.

2023년 상반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활동 우선순위에 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이 있어야 한다. 특사파견·방한초청·다자회의 참석 등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의원 전원의 힘을 유치교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실사단의 국회 방문 일정에 맞추어 세계박람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임을 보증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 중에 있다. 그 속에서 2030년을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 국가로 진입하는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박람회로 선진국 진입을 알렸던 일본, 2010년 상하이박람회로 G2 부상을 선포했던 중국의 전례를 살펴야 한다. 2030세계박람회를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온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부산의 목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목표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일극현상을 해소할 전환점인 동시에, 수도권과 양대 번영의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힘은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개최로 새롭게 태어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남부권 발전 벨트가 그 힘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해야 할 시기다. 한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모두가 지구촌 인맥에게 ‘나도 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유치운동을 펼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되어 유치를 기원하고 희망할 때 비로소 2030세계박람회의 깃발이 부산에서 휘날릴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소멸’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여야 의원들이 지방 중추도시 역할의 중요성과 혁신 거점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민홍철·도종환·김성주·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3월 15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청년층 이탈,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경제성장 정체현상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소멸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지방소멸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 협력의 현주소와 중추도시의 역할 및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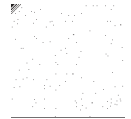
민홍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소도시권에 속하는 경남 김해와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북 포항 등은 비교적 생활 서비스 인프라가 양호하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추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여러개의 거점도시를 특화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대도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도시들이다. 이에 오늘 중추도시의 역할과 중요성을 돌아보고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을 모색해보는 이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 지역구인 포항도 최근 50만 인구

가 깨졌는데 이는 지방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부분의 중추 도시들은 광역시도에 있는 싱크탱크에 의존하다보니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개발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별 특징을 살린 기술 혁신이나 인프라 구축 등 중추도시 자체적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초광역협력의 현 주소와 중추도시의 역할’을,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중추도시 혁신거점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은 “2019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대도시권은 타 도시권에 비해 중앙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활발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인프라 뿐만 아니라 고용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 중추도시들은 지역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미비하고 초광역권 특성에 맞는 비전의 부재, 초광역권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지원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초광역권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중소도시는 어떻게 강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소도시로 발전한 경남 창녕군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 교수



3월 15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홍철·김병욱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창녕군은 지난 2010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계속 인구가 늘고 있다. 전담부서를 신설해 출산장려금, 귀농인 지원 등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대기업 유치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소도시가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선 교통인프라, 산업단지 조성, 인센티브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근 지역간 연계·자족기능 강화해야”

토론에 나선 김석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과장은 “인구 50만~100만 사이인 지역의 중추도시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면서 “행정구역 단위로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김 과장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업무가 많이 분절돼 다부처 협업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의 틀을 넘어 새로운 공간단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으로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로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기존거점 고도화 사업, 지역주도 맞춤형 신성장거점 조성 등으로 지역주도의 혁신 성장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와 과장은 “하나의 도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근지역과 연계·협력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상향식 대응 계획과 각종 특례의 도입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중추도시가 상생해 혁신거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간 ‘초광역 메가시티’ 협력을 지원해 지역주도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체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출근·등교, 업무, 관광으로 연결된 부울경 지역의 연계구조를 예시로 보인 뒤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홍철 의원은 “다양한 거점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중추도시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 윤성혜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돼 같은 해 9월 30일에 최초 시행됐다. 정보통신서비스와 금융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분야에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에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오랜 논의의 산물이었다.

이후 2020년 2월 4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해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관리·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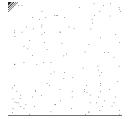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아우르는 정보 보호 체계의 중심으로서, 사회적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교하면서도 시의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다방면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다수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20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정무위원회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확대해 새로운 디지털·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함



으로써,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차량 등에 의한 촬영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규율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해당 기기를 부착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의 운행 기준도 적시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서비스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기업 등의 법 적용 혼선과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온·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하여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기술 발전에 따른 보호 체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를 사용할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요건을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계약·인증·적정성 결정 등으로 다양화해 국제 규범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

제적 추세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국제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전망과 남겨진 과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 국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규율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 전면 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해진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보건복지부가 ‘의료 마이데이터’ 본격화를 발표한 것은 그동안 공공·산업계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기다려왔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정법률은 데이터 시대의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하고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개정 범위와 폭이 큰 만큼 국민의 생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막대할 것이다.

개정법률이 그 시행 과정에서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평가·분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변할 환경에 맞추어 적절한 대처 수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과제일 것이다. 🍵

캘리포니아의 경제 상황과 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 입법 동향



장영환
국회 LA 주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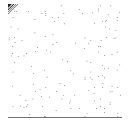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4천만 명에 육박하고, LA시를 포함하고 있는 LA카운티의 인구는 무려 천만 명에 달하며, LA시는 400만 명 정도의 인구로 뉴욕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대도시다.

작년 10월 말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이 독일을 추월하고 세계 4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GDP는 3조 3천566억 달러로 영국(5위), 인도(6위), 프랑스(7위)보다 앞서 있다. 우리나라의 GDP는 1.82조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높은 생활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경제상황 맞은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 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품비, 인건비 등이 천정부지로 상승해 높은 생활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파로 작년에만 50만 명이 다른 주로 이주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방하원의원 의석 수도 종전 53석에서 52석으로 1석 감소되는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와 유가정보서비스국(OPIS)에 따르면 2023년 3월 2일 기준 LA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1갤런=3.7854리터) 당 4달러 83.3센트인 반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37.4센트다. LA카운티의 휘발유 가격이 미국 평균 가격보다 갤런 당 1.46달러, 약 43.2%가 비싼 셈이다. 3월 2일자 기준 환율 1,315.5원으로 계산하면 리터당 1,679.6원인데,



같은 날 서울 시내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57.5원이다.

이 수치를 보면 양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LA카운티의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1위의 산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통계청 자료(KOS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711메가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536메가톤으로 2위이고, 흔히 1위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우디아라비아가 515메가톤으로 3위다. 반면 원유수입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로 2021년에만 122메가톤을 수입했다.

또, 부동산 임대 시장을 살펴보면, 작년 8월 정점을 찍은 후 임대료가 조금 하락했다는 통계가 있으나,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임대료로 힘들어 하고 있다. 부동산 소개 업체인 Zillow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 기준 LA시 평균 임대료는 투베드룸이 3천95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작년 8월의 3천288달러보다는 하락했지만, 작년 초 2천850달러에 시작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8.6% 상승한 상태이고, 원베드룸은 월 2천295달러로 정점이었던 2천395달러에서는 하락했지만, 작년 초 2천99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9.3% 상승한 상태다.

또 다른 경제지표인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실리콘밸리의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델 테크놀로지, 줌, 리프트,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잇단 감원으로 인해 고용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테크기업 해고인력 집계사이트(<https://layoffs.fyi/>)에 따르면, 2022년에 미 전역 1천46개 테크기업에서 16만 1천61명의 근로자가 해고됐고, 올해 들어서는 2월 말 현재 벌써 424개 기업에서 12만 253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은 분야별 양극화 두드러져

반면, 2월 3일 발표된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고용시장 현황에 따르면 유통, 제조 등 전통적인 고용시장에서는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을 정도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미국의 전반적인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40만 1천 개의 비농장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023년 1월에도 51만 7천 개의 새로운 비농장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역시 2022년 12월 기준 15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가 이어지면서 월평균 5만 8천320개의 비농장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분야별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LA 지역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은 7.6%, 에너지는 17.5%가 상승해 주민들 입장에서 부동산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을 피부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급여 투명화 등의 노력

이상으로 캘리포니아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소개를 마치기로 하고, 이러한 고물가와 고용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임금 생활자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2023년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직원 규모와 상관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전년도 대비 0.5~1.5달러 인상됐다. 2022년에는 직원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4달러,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는 시간당 15달러였다. 한편, 2016년에 통과된 임금인상법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5년 연속 3.5%를 넘을 경우 2028년 시간당 임금이 최대 18달러까지 인상될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작년 8월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최고 22달러까지 인상하는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AB257)’이 논란 끝에 제정됐다. 다만, 이 법률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 측이 해당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권자 서명 명부를 주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2024년에 실시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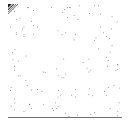
이 법은 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관장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지명하는 1인, 상원 및 하원에서 지명하는 각 1인, 주 관련 부처 공무원 1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주, 본사 대표, 근로자 대표가 각각 지명한 각 2인 등 각계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에서는 임금 문제를 비롯

해 종업원의 건강, 안전,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문별 최저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정 직업을 위한 공적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부여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의회와 주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특정 직업군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작년 8월 캘리포니아주는 직원이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기관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채용공고를 할 때 해당 직군에 지급될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급여투명화법(SB1162)’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10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기업이 직원들의 성별 및 인종별 급여 격차를 주정부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의 많은 주들이 성별 및 인종별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채용 공고 때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해 급여와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콜로라도주를 시초로 워싱턴주, 뉴욕주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메릴랜드주는 구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여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코네티컷주, 네바다주, 로드아일랜드주 역시 채용과정에서 급여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은 어느 나라나 안고 있는 숙제다. 우리나라 역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금 근로자들이 삶을 영위하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적은 4천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에도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입법 동향을 참고할 만하다. 🍌



이달의 청원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은 총 120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이 64건이고, 국민동의청원이 56건이었다.

이 중 지난 한 달 동안(2월 21일~3월 20일) 접수된 청원은 모두 5건(의원소개청원 1건, 국민동의청원 4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은 직업군인들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군인연금의 지급시기를 10년 미루는 등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24일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둘째,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타그리소가 폐암 치료에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약값이 너무 비싸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타그리소의 1차 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셋째,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 또는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자동차 제

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28일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넷째,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청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고 범죄 예방 효과의 실증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참고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상민 의원 외 5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지난 3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은 일부 공인중개사에 의해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 공인중개사협회는 임의단체여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협회 중심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자체 자정작용 및 지속적인 교육,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정리 국회의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소개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이**	국방	2. 24.	국민동의청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	김은이	보건복지	2. 27.	국민동의청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훈	정무	2. 28.	국민동의청원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청원	김선태 외 75,842인 (이상민 의원 외 5인)	법제사법	3. 13.	의원소개청원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	주경식	국토교통	3. 20.	국민동의청원

국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 실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의안 의결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및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안된 13건의 제정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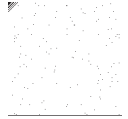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 방식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에 역부족이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규제로 플랫폼 사업자의 규범을 명확히 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가 자율규제 합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회 위원장도 “온라인 시장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소득 격차도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공적 제도로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법적 규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플랫폼사업자·협회 등이 오픈마켓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확산을 기대달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K-콘텐츠 생산이 막힌다면 디지털 경제 분야 수출이 위축되고 국내 창작자 생태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도 “플랫폼 산업은 인공지능·바이오신약·모빌리티·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초고령사회·인구절벽 등 한국이 직면한 난제는 새로운 성장 기술로 극복해야 한다. 한국 플랫폼 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온라



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위, 학교폭력 및 평가자료 유출 관련 현안질의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당시), 서울대 입학본부장, 관계 고교 교장, 학교폭력 전문가 등이 출석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을 간 반포고 측이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한 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점도 쟁점이 됐다. 반포고 측은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우선 보호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 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학교 전담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인성교육과 학부모 교육 확대 및 교권 강화를 통해 학교 폭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자·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논술체제로의 전환을 비롯한 학력평가 시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개최 를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3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4월 세계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유치위원회 등으로부터 준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강력한 유치 후보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경쟁 상황, 세계인의 부산 방문 거점이 될 가덕도신공항 개항 준비현황, 관련 홍보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방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현장 방문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위원들은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기로 3월 16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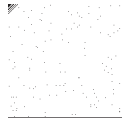
이번 현장방문에는 한기호 위원장을 비롯해 신원식, 성원종, 이현승, 임병헌,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옥주, 배진교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023 FS 연습의 특징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한기호 위원장은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며, 연합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주인공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전주혜 위원(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그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개시범위를 넓히겠다며 내놓은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상위 규범인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다는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큰 틀에서 봐서는 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나온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면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국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모은 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의견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외교관계를 진행하는 것도 존중해야 한다. 이를 다 모아서 해결책을 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박범계 위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장동혁 위원(국민의힘)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수완박 법안 선포의 효력을 유지하는 의견을 냈다는 지적에는 “재판관들이 정치적 지향성이나 가입했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NEWS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가족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7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 약 1.2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의연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이 세비의 3%를 각출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국회 소속기관 직원이 동참해 조성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표 의장은 “유례 없는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1만 5천 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많은 종교·사회단체들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형제애가 축적된 만큼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의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동부지역 도시가 완전히 붕괴된 만큼 앞으로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현물 자원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님의 좋은 제안으로 동료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동참해 작지만 우리 마음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인류 평화 및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이 걱정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일상을 되찾고 용기를 갖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윤성호 부회장, 이상천 사무총장, 박선영 모금전략본부장, 장윤정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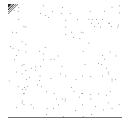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 국회부의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21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양국 간 교류 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표 의장은 “베트남이 인상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양국 관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년 12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그에 걸맞은 수준의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측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해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혀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부산 박람회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



식지지 입장을 조속히 표명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회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 제주포럼 기간(5.31~6.2) 중 진행될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에 의회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또 “양국 간 경제협력이 증진되려면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속한 인가, 현지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노동허가 발급 등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하이 부의장은 “교역, ODA, 관광, 인적교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한국 내 베트남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한국의 입법 및 전자국회 구축 경험 공유, 청년 및 여성의원 교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베트남 측에서 이 타잉 하 니에 카담 국회 민족위원장, 레 꽁 휘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장, 응우옌 타잉 콩 국회 경제위원회 위원, 응우옌 부 똥 주한베트남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포럼 협력 위한 MOU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3월 6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기관 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기능 강화와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제주포럼의 국회참여와 제18회 제주포럼(5.31~6.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천 개 섬을 가진 대한민국과 수만 개 섬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제주도가 그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의 연대를 만들어 가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제주포럼이 ‘아세안리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의 법적지위를 국회가 더욱 굳건히 다져주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한-아세안국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부산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5일 국회부산도서관 1층 중합자료실에서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진양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발전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NEWS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업박람회 행사 공동 개최 등에 관한 협력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 개발에 관한 협력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이용 확대 및 양 기관 보유 자료의 상호 이용에 관한 협력 등이다.

국회부산도서관은 하반기 중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 협력 프로젝트’ 행사를 기획해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면접컨설팅, 찾아가는 사진관,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회도서관과 부산경제진흥원이 함께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회부산도서관은 영남권 최초의 국가도서관이자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양 기관의 상호발전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최신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23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했다.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성장률 전망을 2.9%로 0.2%p 상향 조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7%로

0.3%p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예·결산 심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2023 대한민국 재정’은 총 3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와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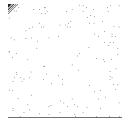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이행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무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용과 재정과정별 재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강했다.

제2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내역을 다뤘고, 제3부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했다.

그 밖에 글상자를 통해 한국은행 잉여금의 발생과 처분, 2023년도에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37호’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처장직무대리 이신우) 3월 21일 ‘NARS info’



제37호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再論): 쟁점과 과제’를 발행했다. 이번 ‘NARS info’ 제37호는 2023년 1월 26일에 발간한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再論): 쟁점과 과제(‘이슈와 논점’ 제2045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국내 소비 식량 중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식량자급률의 목표 설정 및 재설정 추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과 향후 과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나 소득 수준을 갖춘 국가 대부분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이러한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표치가 자주 바뀌었고 이를 달성한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식량자급률 목표가 보다 진지하게 검토되고 설정·추구될 수 있도록 지금껏 드러난 쟁점 속에서 근본적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월 2회 주요 보고서 또는 현안 자료를 알기 쉬운 그래픽으로 정리한 ‘NARS info’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

‘연금개혁’ 주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월 21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당부했으며,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토론회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연금특위에서 김성주 간사, 이용우·배현진·윤창현 위원이 참석했으며, 김학용·유동수·박용진·박수영·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 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 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가 올해부터 ‘국회연구조정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인 국회 소속기관들의 공동연구 결과도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1.1.]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2020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또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러 지방 소멸 위기도 눈앞에 다가왔다.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 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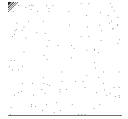
지역 주도의 인구 대응책과 ‘생활인구’ 개념 도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이유에 대해 문정원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했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해,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지역의 활력 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상향식으로 시·군·구 → 시·도 →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정주인구 외에 통근·관광·휴양·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관계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지원과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외국인 체류 등 특례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의 시행으로 각 지자체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준비에 들어갔다.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도입된 개념으로 ‘특정한 시기·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으로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생활인구 늘리기’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에 맞추자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동연수(워크숍),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두 지역 살아보기’나 ‘위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 같이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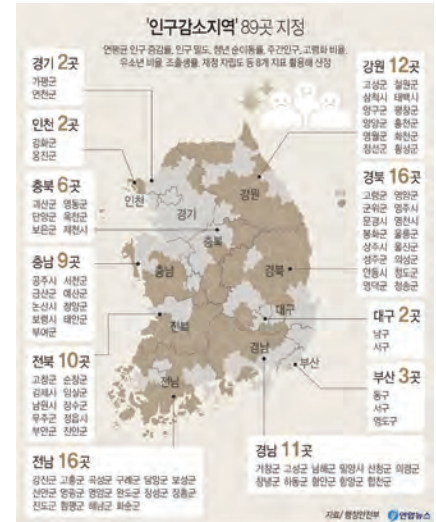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다른 지역에 체류하며 추가 생활거점을 갖는 것으로, 경기도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을 벤치마킹해 2015년부터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운영하고 있다.

‘위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휴양을 즐기고 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제주도 구좌읍에서 마을 주민이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에서 위케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서울 거주 초·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전학해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하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서울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551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학부모를 포함한 총 715명의 생활인구가 유입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참여 단체를 모집했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 전남 목포시 ‘괭자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담사대’ 등 3년간 매년 1곳씩 시범 조성됐고 2021년과 2022년에는 12곳씩 추가돼 현재 27곳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중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및 향후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연계 지원 등이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한시적인 기금이라서 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계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욱이 기금의 운영 성과를 매년 분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글 고영선



국회, 두 차례 본회의 열고 법률안 113건 의결

국회는 2월 27일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됐다.

이어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제404회(임시회) 제1차)를 열고 법률안 15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술인 긴급지원대책’ 수립을 규정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법률에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각각 게임과 만화 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문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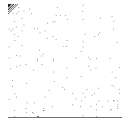
최근에 사행성 유도, 확률 조작 등이 문제가 된 ‘확률

형 아이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얻은 것과 결합해 얻는 게임 아이템 중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함께 의결된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제작 단계부터 웹상으로 구현되는 ‘웹툰’을 ‘만화’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만화’의 정의를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유무형의 매체에 그려진 것을 포함하도록 확대했으며, ‘웹툰’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규정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난개발, 지역 불균형 등 농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농촌 중심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난개발 및 불균형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공간 개발·이용 및 기능 회복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시장·군수 또는 특



별자치시장은 효율적인 계획 추진을 위해 농촌마을보호 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 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 하고 상호협력해 시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 등은 주민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다룬 자치규약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제도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그 자격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개정법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 결정, 추가등록제한, 등록말소의 사유로 추가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등록 말소 사유 등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함께 의결된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대인의 성명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첨단기술의

무기화, 공급망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또 제정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국가전략기술 지역 기술혁신허브 구성·운영, 뛰어난 연구인력에 대한 장려금 지급, 해외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한 비자발급요건 완화 추진, 기술 보안을 위한 부처간·국가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행정 각부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현행법상 사망자의 이웃이나 친구 등은 연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법은 무연고 사망자가 생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또는 고인이 생전에 서명한 문서나 ‘민법’상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위탁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대상 기업이 위반행위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을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제외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시설 또는 업종에 추가했다. 또, 식품접객업 등에 전자상거래 등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의무화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 정보 고지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 규정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추가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성교육 전문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또 개정법은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에 오류가 있으면 누구든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별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호별로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또한 개정법은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로 직장 내 성폭력, 폭행, 상해, 강요의 죄로 벌금형(직장 내 성폭력은 100만 원 이상, 그 외에는 300만 원 이상)이 확정돼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적용된 우선출자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해 자본 조달 방안을 다양화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연장·전시관 등의 폐관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의 정상적인 예술활동이 제약돼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사회재난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의정종합뉴스

빠르고 정확한 보도!
예리한 이슈분석과 치열한 토론!

국회라이브6

월~금 저녁 6시 / 생방송

앵커 강아람
(前 KBS 기상캐스터)

앵커 신동진
(前 MBC 아나운서)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추진합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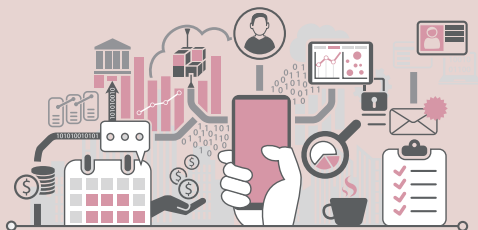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2-28 의결
본회의 2023-01-30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촉발한 변화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지 예측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사회가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본 인프라로 인식한다. 인터넷 안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엄청난 데이터가 존재하며, 또 다른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인터넷이 데이터 폭증을 일으킨 결과, 세상에 2배 이상의 데이터가 짧은 시간 동안 생성되었다.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세상을 더 객체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통합 데이터와 지휘 체계를 정보 통신의 서버 개념으로 구현했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 모든 금융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으며, 모든 은행은 상위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의 속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서버나 서버 기능을 하는 조직을 거치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금융거래를 가능케 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은 거래 기록이 분산된 형태로 개인 지갑에 남는다. 이로 인한 데이터 양의 폭발적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코인은 세간의 화두이고 사건도 많아서,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요소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실세계를 만들기 위해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분산 원장은 강력한 보안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예전에는 해커가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스템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훔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분산된 모든 원장을 동시에 해킹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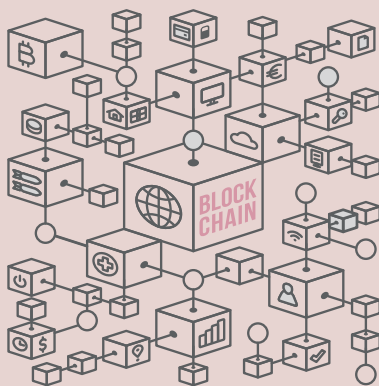
매우 어려워진다. 현대의 집 내부를 보면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인해 모든 전자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다. 해커가 침입하면 집 안의 모든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집 안에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내가 자주 보는 TV프로에 대한 정보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계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주소록 등이 모두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종종 뉴스에서도 사건사고로 다루고 있다.

블록체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세상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커넥팅랩에서 2021년에 출간한 ‘블록체인 트렌드’에 따르면, 서버나 플랫폼에 의한 지배구조에서 분산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의 변화는 사물민주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수소 에너지가 활성화 된다면 산유국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느 나라나 기술만 있으면 자립적인 에너지 자원 독립국이 될 수 있으므로, 수소 에너지를 에너지 민주화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공지능의 한계 중 인공지능이 사람의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세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탈중앙화 신원증명(DID)이 가능해지므로,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바타가 제한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생활에서도 각종 생활에 필요한 공공 증명서 발급이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해진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로 작동하고 블록체인 기능으로 상당한 제약이 해소되었다.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할수록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데이터는 양과 속도에서 저장장치의 급속한 소진을 유발할 정도다.

블록체인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없지 않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면 고치기 힘들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에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이렇게 세상을 흥분시킨 기술은 역사적으로 흔치 않다. 블록체인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교류하면서 서로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면 블록체인은 다음 산업혁명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글 김동철 공학박사, 유비케어 사외이사



그린피스 활동가가 국회에서 일하게 된 까닭은?



예운해 비서관
류호정 의원실

Q. 국회에서 일하기 전 그린피스에 몸담고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평소 국제기구에서 일해보고 싶어 관심을 갖고 찾아보던 저는 2016년 그린피스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5년 정도 그린피스에서 직원이자 활동가로 있었습니다. 그린피스에서 했던 여러 활동 중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총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

로 이야기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 평균기온을 1.5도로 할 것인가, 2도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IPCC에 1.5도 기준을 촉구하기 위해 총회가 열렸던 송도 컨벤션센터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온몸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산업 클라이밍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상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레저보트 운전면허도 취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륙양용 전천후’ 환경 활동가였습니다.

Q. 국회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시고 생전 처음 입장을 해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위원회의 청년위원장이었던 류호정 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당원 모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과 사무국장으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류호정 청년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20년 총선 당시 저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선거를 함께 치렀습니다. 30년 넘게 분당이라는 도시와 함께 성장한 ‘분당청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들께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제 고향인 성남시, 분당 주민들을 위한 정치에 일조하고 싶었기에 자연스럽게 류호정 의원실에 합류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류호정 의원실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보통은 야탑에 있는 지역사무실의 준말인 ‘야무실’에서 지역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만나 고충을 처리하고, 지역 행사를 수행하는 등 의원님의 지역의정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의원님은 대중교통을 즐겨 이용하시지만, 상황에 따라 제가 차



량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으면 사회를 보거나 ‘저글링’을 선보이는 등 다소 예능적인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Q. 류호정 의원실의 특별한 점이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의원실의 특별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먼저 평등한 문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원실에서 ‘예사’라고 불립니다. 예윤해 사무국장의 준말인데, 예전부터 듣던 호칭이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님의 닉네임인 ‘호정’을 비롯해 캐리, 최강, 이브이, 예동 등 모든 보좌진은 각자 고유한 닉네임에 ‘님’을 붙여 서로를 호칭합니다. 아무래도 직급으로 상대를 부르다 보면 매번 고하를 인지하게 되어 스스로 말과 행동에 제약을 갖기 쉬운데, 저희 의원실은 평소 서로 존중하고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대통령실이나 동료 의원님들의 명절 선물이 의원실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실은 ‘사다리타기’로 각자 필요한 명절선물을 뽑아 갑니다. 명절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진풍경이 펼쳐지지요. 사다리타기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물론 사다리타기를 진행하는 호정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류호정 의원님께’라고 쓰여 있는 선물을 보좌직원들과 나누는 호정님을 볼 때마다 평등한 문화를 지향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등한 문화 외에도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호정님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의원실 내부에는 기존의 칙칙한 원목 가구 대신 알록달록하고 실용적인 가구와 집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탈권위적이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의원실의 분위기가 반영된 인테리어인데,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 못지않게 보좌진도 무척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든 점은 무엇이고 보람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 의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삼성에 기술 탈취를 당했던 중소기업인, 생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타투노동자, 임금 떼이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 행복주택이라고 들어왔더니 형편없는 현실을 마주한 청년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는커녕 있는 권리마저도 빼앗긴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오히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황당한 일들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정말이지 절망감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민원들을 의원실이 해결하는 데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이라는 정치인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분당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겪은 모든 경험을 류호정 의원의 재선이라는 목표에 맞춰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호정 의원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삶, 모두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의 시작이 성남시 분당이었던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만드는 일이 제 소임인 만큼 내년 총선까지 신나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유키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1789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

“현재 프랑스에는 사회주택 입주도 불가능한 ‘배제된 집단’이 존재하며,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사회주택이 사회적 배척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프랑스 ‘하층민’에게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19쪽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섰고,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거리, 고시원, 여인숙, 사회복지시설, 쪽방, 반지하, 옥탑과 같은 ‘집’답지 못한 곳에 살고 있다. 비좁음, 과밀, 채광, 환기, 냉·난방,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는 이러한 거처에는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화재, 수해, 폭염, 한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목숨을 앗아간 대표적인 참사다.

‘최저주거기준’에서는 필수적인 설비, 구조, 성능,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 면적이나 용도별 방의 개수 이외에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거처를 임대한다고 해도 제재가 없으며, 열악한 주거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임대료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거급여는 집다운 집으로 주거 향상할 수 있을 만큼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비적정 거처에 거주



저 자 장-마르크 스테베
역 자 강대훈
출판사 황소걸음
출판일 2022. 9.



하는 최저소득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부족하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노동자 계층 전반이 주택난을 겪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자 가정은 빈민굴, 허름한 셋방, 고미다락, 동굴 등 아무 데나 살았다. 대다수 주택은 환기가 안 되고, 쪼개진 방, 더러운 실내, 인구 과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비위생적인 주택의 근절을 위해 1850년 지자체별로 주거정화위원회를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건물주에게 주거 정화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비좁고, 환기가 안 되며, 비위생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프랑스 사회주택 법제를 정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사회주택 관련 주요 법률이 제정되었다. 1894년 지그프리트 법을 제정하고 서민주택 건설을 개인이나 민간에 맡겼는데, 주택 공급 실적은 저조했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1912년에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네바이 법을 제정했고, 공권력이 사회주택 문제에 개입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다.

1928년에는 판매와 임대가 모두 가능한 서민주택을 규정하는 루쉐르 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서민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줬고, 수많은 노동자가 주택 소유주가 됐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주택 취득을 위한 소액 출자 시스템과 보조금 지원 제도는 폐지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서민주택 공급은 활발하지 않았는데, 2002년 사회적연대와도시재생법, 2013년 뒤플로 법 제정으로 사회주택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뒤플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 내 주택 가운데 25% 이상을 사회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694개 사회주택국이 480만 채 이상의 사회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심화한 사회주택 지구와 타 지구의 격차, 즉 낮은 가구 소득, 높은 실업률, 낮은 학업 성취도 등의 문제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저자는 사회주택 지구의 계도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사회주택 지구의 고립과 교외의 팽창, 도심지의 부르주아화는 ‘도시 공간의 사회적 변별화’, 즉 도시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공간적 단절의 지표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사유재산권과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집단이 우세한 사회에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민간에 서민주택 확대를 맡기거나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지자체의 사회주택 건설 의무를 통한 공급 확대, 사회주택의 계도화가 발생한 역사적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글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토지제도·과거제도 개혁을 담은 ‘반계수록’



반계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조선 실학의 창시자다. 일찍이 위당 정인보는 “조선 실학의 1조(一祖)는 반계 유형원이요, 2조(二祖)는 성호 이익이요, 3조(三祖)는 다산 정약용이다”라고 말하여 반계가 조선 실학이라는 학문을 개창하여 성호에게 넘겨주고, 성호가 다산에게 넘겨주어, 다산 정약용이 조선 실학을 집대성(集大成)한 학자라는 결론을 맺었다. 성호와 다산 사이에는 연암 박지원·담헌 홍대용·조정 박제가 등의 북학과 실학자들이 큰 업적을 이룩했지만, 다산은 선배들인 그들의 북학사상까지 모두 습득해서 자신의 학문을 이룩했으니, 집대성의 공을 인정해서 세 분을 거명했다고 보여진다.

반계 유형원은 서울 태생이다. 1622년 외가인 소정릉동(지금의 정동)에서 성호 이익의 종조부인 이지완의 외손자로 태어났다. 태어난 다음해에 한림 벼슬을 하던 28세의 아버지 유흠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고아로 할아버지 아래서 성장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반계는 어려서부터 외숙인 이원진과 고모부인 김세렴의 지도 아래 학문을 익혔다. 이원진은 관찰사를 지

낸 관인 학자였고 김세렴은 판서를 지낸 관인 학자로서 반계의 기초학문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준 스승이었다. 20대에 김세렴이 함경감사와 평안감사를 지낼 때는 그곳을 찾아가 고구려의 옛터를 관찰하면서 국토지리에 관한 식견을 늘리기도 했다. 당시의 학문이란 일반적으로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이어서, 반계도 그 무렵에는 성리학과 예학으로 주자학의 기초를 닦기도 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은 문물제도가 무너지고 국가재정은 파탄이 나 백성들의 궁핍한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런 정치·경제의 국가형편은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풍토에서는 나라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에 뜻있는 선비들은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사상 등에서도 영향을 받아 나라와 백성에게 실익이 되는 학문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경향에 따라, 최초의 실학을 대표하는 저서가 반계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이라는 26권 13책의 대저다. 서울과 여주 등의 경기도에서 살던 반계는 1653년인 32세에 큰 뜻을 품고 선대의 유산으로



전답이 있던 전라도 부안의 우반동으로 이사가 삶의 터로 정하고 본격적인 학문연구에 생을 바치기로 했다. 반계서당을 산속에 짓고 많은 서적을 쌓아놓고 학동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반계수록 저술에 착수하여 대업을 성취하기에 이른다.

32세에 저술을 시작하여 19년의 세월을 거치며 1670년에 완료했으니 얼마나 긴 세월이고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간 책인가. 그러나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1673년 52세의 반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비록 공간은 되지 않았으나 필사된 책이 몇몇 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책의 높은 가치가 인정받기에 이른다. 반계 사후 46년 째이던 1711년 반계와 동시대의 인물인 소론계의 종장 명재 윤증(尹拯)은 수록을 읽어본 뒤, 부안과 충청도 논산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함께 살아가면서 만나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고 책의 높은 가치를 찬양했다. “수록이라는 책은 처사 유형원 군이 지은 책인데, 책을 읽어보면 그 규모가 크고 재식(才識)의 높음을 상상할 수 있다. … 세상을 경륜할 뜻이 있는 사람이 채택해 실행한다면 그대가 저술했던 공로는 그때에야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사라져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발문을 달아 세상을 경륜할 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계의 계승자 성호 이익은 ‘반계수록’과 율곡의 ‘성학집요’가 조선의 대표적 저서라 하였고, 해옹 홍한주도 그의 ‘지수염필’이라는 저서에서 ‘반계수록’과 ‘성학집요’가 조선의 최고 저서라고 분명히 밝혔다.

‘반계수록’은 국가제도를 바꾸고 고쳐서 써고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자는 뜻으로 저작한 국가개혁의 방향을 정해준 책이다. 토지제도에 공개념을 적용해 균등한 세상을 만들고 암송과 저술로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공적인 천거제도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여

용인제도를 바꾸자는 내용의 책이다. 삼전도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청에 항복한 국가적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낡은 제도를 고치고 바뀌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천하국가를 경영할 논리를 제공한 책이다.

편제를 보면, 전제(田制)·교선제(敎選制)·임관제(任官制)·직관제(職官制)·녹제(祿制)·병제(兵制)의 여섯 부분과 보유편의 군현제(郡縣制) 1편으로 구성됐다.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여 부패와 타락을 막고 국부를 증진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놓은 책이다. 이른바 실학의 경세치용 학파들엔 마땅히 반계수록이 전범(典範) 역할을 하였고, 특히 성호와 다산은 반계수록을 기본으로 거기에 더 창의적인 내용을 결합하여 자신들의 실학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반계의 학문을 계승하고 또 그의 학문을 가장 높게 평가한 사람은 역시 성호 이익이었다. “조선을 세운 이래로 세상을 경륜할 인재로 말하면 모두가 반계를 첫머리로 꼽는다”라고 말하며, 조선을 대표할 경세가는 바로 반계라는 찬사를 보낸 사람이 성호였다. 그런 귀한 책이 반계의 사후 100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증의 제자로 승지를 지낸 덕촌 양득중은 선생의 집에서 반계수록을 얻어 읽어보고, 깜짝 놀라 나라에 상소를 올렸다. 영조 때의 일이다. 반계수록을 구하여 읽어보고 빨리 공간하여 나라 살리는 방책으로 활용하라는 뜻이었다. 사후 100년이 다 되는 1770년 영조의 특명으로 반계수록이 나라에서 간행됐다. 다산 정약용의 사후 100년이 되어서야 여유당전서가 간행된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이런 고전들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니 나라가 제대로 갔겠는가. 그래서 1910년 나라가 망하여 오늘까지도 분노하는 것 아닌가. 🍵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국회 미술관은 국회에 전시된 미술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허건, '강산무진도', 한국화, 수묵담채, 260×76.5cm

전통과 현대를 잇는 20세기 미술의 역사적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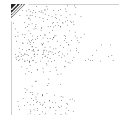
허건의 '강산무진도'와 '삼송도'

‘동양화/한국화=수묵화’라는 도식은 20세기 후반 한국의 미술계에서 탄생한 역사적 개념이다. 한국의 전통 그림이 수묵화만이 아니라 채색화에서도 엄청난 성취를 이뤘다는 점을 고려 불화나 고구려 벽화, 민화, 박생광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당시 대중적인 파장을 일으킨 대형 전시들을 통해 한국화에서 채색의 중요성을 확인한 후 ‘동양화/한국화에는 수

묵화와 채색화 양 갈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동양화/한국화는 수묵담채의 산수풍경’이라는 인식이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방 이후 일본화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색 탈피

여기 수묵담채 산수풍경의 대가, 남농 허건(南農 許



樋, 1908-1987)이 있다. 그는 20세기 한국의 전통화단을 이끈 거장이다. 허건은 전업화가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호남 지방의 남종화 계열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대미술로 연결한 한국 근현대기의 중요한 화가다. 근세 호남 화단의 선구자인 소치 허련(小痴 許鍊)의 손자이자, 허형(許滢)의 넷째 아들로서 허씨 집안의 화맥을 이은 인물로, 그의 할아버지 허련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허건은 목포에서 활동하면서 20세기 남도 화단을 이끌었다. 남종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선대와 차별화를 시도했던 허건은 화재(畵才)를 달고 여기에 맞는 실경 사생 기법으로 산수화 개념을 풍경화 개념으로 바꾸어놓았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무렵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그는 20대에 들어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성하면서 본격

적으로 미술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해방까지 14회 조선미전에 입선했으며 1944년에는 조선총독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화가로서의 활동으로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난방을 하지 못해 동상에 걸렸고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해방 이후 허건은 일본 화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색을 탐피했다. “문전에 입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화풍을 본뜬 것”이라는 술회를 통해 그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화의 채색화풍이 식민지 조선에 지배하고 있었음을 토로했고, 이어 전통적 화법을 다듬어 남종화의 현대적 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광복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미전은 조선총독부가 주최하는 관변 행사이므로 일본미술문화의 핵심인 일본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화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채색화 계열로서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릿하게 표현하는 이른바 몽룡체의 경향을 나타낸다. 식민지 조선의 미술가들 또한 그 영향을 받아 채색화 계열의 작품을 제작 발표했다. 한국화의 거장인 박성광이나 김기창의 경우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화풍의 채색화를 그렸는데, 이후 평생동안 왜색 화풍 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남농 허건의 경우도 광복 이전의 채색화와 이후의 수묵화 경향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호남 화단의 전형적인 지역화풍을 형성

한편 1960년대 이후 허건의 작품은 자신의 독창적인 화풍을 개척한 후 큰 변화 없이 다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수풍경의 주요 장면에 소나무가 등장하고 빠른 붓질로 화면을 장악해 들어가는 솜씨가 먹그림 대가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실경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대담한 변형과 생략과 과장으로 돋보이게 만들며,



허건, '삼송도', 한국화, 수묵담채, 288×98cm

게다가 수목 특유의 농담 조절로 절정의 먹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허건의 먹그림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호남 화단의 전형적인 화풍을 이루어 독특한 지역화풍을 형성했다.

‘강산무진도’는 2.6m 대형 화폭에 대자연의 경관을 그려넣은 풍경화다. 본디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는 조선 후기의 화가인 이인문의 산수화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을 담아 대자연의 풍광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허건의 이 그림 또한 커다란 화면의 한 편을 가득 채운 바위산과 나무들이 위대한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오른쪽 하단과 상단의 물과 하늘은 여백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상물이 가득 들어찬 왼쪽 화면과 대비를 이루면서 수목화 특유의 가득참과 비움의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

세 그루의 소나무를 담은 ‘삼송도’는 여백의 미학을 구사하면서도 가득참의 맛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소나무 전체가 아닌 부분만을 포착해 굳건하고 기개 넘치는 소나무의 멋을 잘 나타낸 작품이다. 특히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잎을 표현하기 위해 솔잎을 그려낸 붓질에 섬과 여림, 진함과 열음, 빠름과 느림의 맛과 멋을 담아내어,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허건의 기량과 감각을 실감할 수 있다. 사물의 전체가 아닌 부분을 포착해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압축적인 미감을 표현하는 것은 현대미술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선이다. 평생을 엿비슷한 소재와 주제로 일관한 허건의 그림에서 이렇듯 현대미술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통과 현대를 이어낸 가교의 시대 20세기의 미술이 남겨준 역사적 선물이다. 🏠

글 김준기(미술평론가·광주시립미술관장)



달에게로 전진

해질 무렵 떠오른 달과 함께 ‘애국애족의 군상’을 촬영해보았습니다.
마치 달을 향해 손을 내밀고 전진하는 듯한 느낌이
새롭고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이나영, 서울시 양천구)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 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는 최고의 가치체제다. 세계사에서 헌법이 등장한 것은 근대국가 가 형성되던 시기였다. 영국은 1689년 12월 입헌주의의 기초가 되는 권리장전을 만들었고, 미국은 1787년 연방 헌법을, 일본은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헌법은 해방 이후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을까?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구성된 국회가 ‘제1대국회’가 아닌 ‘제헌국회’라 불리게 된 것은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제헌국회는 1차 회의에서 의장(이승만)과 부의장(신익희, 김동원)을 선출했고, 2차 회의에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의 제정에 참여 할 기초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형위원 10명을 각 도별로 선정했다.

<제헌국회 제1회 제2차(1948.6.1.) 본회의>

○부의장 김동원 이제 각 도에서 전형위원을 택한 것을 사무국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서울시 이윤영, 경기도 신익희, 충청북도 유홍열, 충청남도 이종린, 전라북도 윤석구, 전라남도 김장열, 경상북도 서상일, 경상남도 허정, 강원도 최규옥, 제주도 오용국, 제 의원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이상 10명인 각 도에서 택한 전형위원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전형위원들이 선임한 헌법기초위원 30명과 국회기초위원 15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5차 회의록에는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 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 결과 등 보고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제헌국회 제1회 제3차(1948.6.2.) 본회의>

1. 헌법등기초위원선임보고의 건

○이윤영 의원 (……) 먼저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입니다.

유성갑, 김옥주, 김준연, 오석주, 윤석구, 신현돈, 백관수, 오용국, 최규옥, 김명인, 이종린, 이훈구, 유홍열, 연병호, 서상일, 조현영, 김익기, 정도영, 김상덕, 이강우, 허정, 구중회, 박해국, 김효석, 김병희, 홍익표, 서성달, 조봉암, 이윤영, 이철천, 이상 제씨는 삼십 분입니다. 삼십 분인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으로 전형해서 보고합니다.

<제헌국회 제1회 제5차(1948.6.8.) 본회의>

○의장 이승만 (……) 그 외에 무슨 보고 있나요?

○사무총장 전규홍 있습니다.

보고서

단기 4281년 6월7일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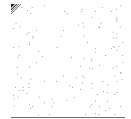
헌법기초에 관한 건

제4차 본회의에서 위촉하온 표제의 건에 관하여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온 결과 좌기와 여히 중간보고하나이다.

1.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서상일 의원, 부위원장에 이윤영 의원이 각각 당선함.

2. 전문위원을 유진오, 고병국, 임문환, 권승열, 한근조, 노진설,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이상 10인을 결정함.

3. 본 기초위원회와 전문위원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유진오 전문위원 외 일부 전문가의 기초제출한 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하고 법전



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유진오 전문위원의 입법취지 설명과 각 장별의 질의응답을 완료한 후 제1장 제2조부터 제7장까지는 축조적으로 심의결정되었음.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열여섯 번의 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만든 헌법 초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17차 회의에 상정되면서 헌법안 제1독회가 시작되었다. 헌법기초위원 중 한 사람이 축조해서 전문을 일독했고 헌법의 근본정신에 대한 유진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다.

<제헌국회 제1회 제17차(1948.6.23.) 본회의>

○서상일 의원 (……) 그러면 이로부터 조현영 의원이 나와서 축조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의원 (낭독)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102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속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서상일 의원 이 헌법의 초안은 우리 나라 현하 헌법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수로 있는 유진오 씨를 중심으로 해서 차계 전문가가 모인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월여를 두고 많이 검토를 거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이 헌법의 원안을 기초한 관계로서 이 헌법의 근본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헌법안 제1독회의 축조심사와 대체토론은 21차까지, 제2독회는 22차에서 27차까지 이어졌으며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명칭이 정해졌다.

<제헌국회 제1회 제27차(1948.7.7.) 본회의>

○부위원장 김동원 그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초위원장으로서 이 헌법이 명칭이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희 의원 나는 이 책 제목을 하나 동의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냥 헌법 초안이라고 이때까지 써나왔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관사로 해서 이 책을 대한민국 헌

법이라고 동의합니다.

○이진수 의원 재청합니다.

○김상덕 의원 삼청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원 그러면 이 헌법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자는 동의, 재청, 삼청이올시다. 거기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동의의 가부문겠습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58인, 가 112인, 부 없습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안 제3독회는 이틀간(27차, 28차) 진행되었고, 28차 회의에서 전원기립 표결로 103조의 대한민국헌법 제1호가 탄생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공포식이 거행되었다.

<제헌국회 제1회 제28차(1948.7.12.) 본회의>

○의장 이승만 그러면 이 전문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을 가계 여가면 기립하시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103조를 다 낭독한 대로 꼭 통과했다는 표적입니다.

(전원기립)

한 분도 빠짐이 없으니까 전체가 통과된 것이니까…….

(박수)

<제헌국회 제1회 제32차(1948.7.17.) 부록>

대한민국 헌법 공포식

(……)

대한민국 헌법 공포사(이승만 의장)

삼천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야 삼독(三讀) 토의로 정식 통과하야 오날 이 자리에서 나 이승만은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이 간단한 예식으로 서명하고 이 헌법이 우리 민국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선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아홉 번 개정되었고, 1987년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0차 개헌이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글 신연희 속기사무관(의사국 의정기록1과)

발아래 서울의 풍경, 파노라마처럼 흐르다

북한산 비봉능선



아스라한 도심 풍경.



서울 사람들에게 동네 뒷산을 빼고 가장 많이 가본 산을 꼽아보라면, 단연 장군처럼 늠름한 모습으로 수도 서울을 호위하고 있는 북한산(837m)이 아닐까.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는 뛰어난 접근성도 그렇지만, 북한산만이 가진 깊고 웅장한 매력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가깝다고 북한산을 동네 뒷산급으로 취급하면 곤란하다. 단지 도심에 자리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 15번째 국립공원이요, 미끈하게 잘 빠진 화강암 봉우리들은 그 어느 명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한강을 굽어보며 높게 솟은 북한산은 주변에 이렇다 할 산이 없어 홀로 드높다.

서울 사람들은 지나가다 매일처럼 보는 산이지만, 북한산은 북쪽의 백두산, 남쪽의 지리산,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묘향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오악(五岳)의 하나로 꼽히는 명산이다. 예부터 서울을 수호하는 산이라 하여 진산이라 불렀으며, 실제로도 서울을 끌어안고 웅장한 산자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상인 백운대에서 시작해 암벽등반의 메카인 인수봉, 서울을 발아래 둔 비봉과 아찔한 원효봉 등 크고 작은 바위 봉우리들이 불쑥불쑥 치솟아 장관을 이룬다. 또한 2천년의 역사가 담긴 북한산성 등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을 품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 연간 등산객이 500만 명에 이를 정도다. 기네스북에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는 산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덕분에 정규 등산로만 100개에 달하고, 샅길은 셀 수도 없다. 국립공원 공식 탐방코스만도 13개에 이를 정도. 어느 길이나 서두르면 반나절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수도 서울을 끌어안고 나래를 펼치다

북한산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산의 최고 매력덩어리 봉우리들을 탐방하는 능선산행이다. 주능선, 의상능선, 우이능선, 진달래능선 등 여러 코스가 있지만 백미는 비봉능선이다. 거리는 서쪽 향로봉에서 문수봉까지 2.5km에 불과하지만 발아래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면서 북한산 전체를 조망하기에 이만한 데가 없다.

비봉능선을 타려면 지하철 3호선 불광역을 들머리로 하거나 종로구 구기동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불광역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죽두리봉, 향로봉, 비봉,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산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경사진 바윗길로 시작되고 긴 비탈길을 올라야 하기에 초보자들에게는 쉽지 않다.

이에 비해 구기동을 들머리로 삼으면 완만한 숲길을 따라 능선으로 올라탈 수 있어 초보자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 코스는 짧지만 웅골차다. 구기동 비봉탐방지원센터를 지나 향로봉, 비봉, 승가봉, 문수봉을 넘어 대남문에서 다시 구기동으로 하산하는 순환코스로 전체 약 7.5km, 4~5시간 정도 짜릿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구기동 이북5도청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맞은편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비봉탐방지원센터가 나오고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숲길이지만 한 시간 정도 비탈길을 올라야 한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호젓한 숲길을 눈에 담고 쉬엄쉬엄 오르다 보면 능선을 만나는데, 이때부터 길이 순해져 발걸음이 한결 편해진다.

향로봉에서부터 이어지는 비봉능선에 올라 10여 분쯤 걸으면 눈앞에 북한산 최고의 명물 비봉이 우뚝하다. 화강암들이 켜켜이 쌓인 비봉은 오르는 길이 험해 통제할 때가 많다. 바위 타는 것에 익숙지 않다면 우회할 것을 권한다. 추락사고가 적지 않게 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비봉이란 이름은 정상에 세운 진흥왕순수비에서 연

유했다. 신라 진흥왕은 555년 한강 일대를 평정하고 그 업적을 기리고자 비석을 세웠다. 국보 3호인 진흥왕순수비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했으니 고구려와 백제는 ‘넘보지 말라’는 표시다.

현재 진짜 순수비는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원형 복제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비록 진짜 순수비는 아니지만, 그 옆에 서면 진흥왕이 점령한 한강 유역의 풍경이 훤히 보인다. 시선을 돌리면 북한산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뿐더러 서울 시내가 손금 들여다 보듯 눈에 들어와 신기하다.

아스라이 산성길 따라 흐르는 도심 풍경

비봉을 조심조심 내려와 10분쯤 더 가면 널찍한 공터에 이르고 신기한 모양의 바위가 나타난다. 사모바위다. 조선시대에 높은 공무원들이 쓰던 모자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변 경치가 수려하고 쉴 곳이 많아 산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다. 음식을 가져왔다면 이곳에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순서다.

대남문





북한산의 명물 오봉

다시 길을 이어 야트막한 승가봉을 넘으면 신기한 모습의 자연돌문과 마주한다. 자연이 조각한 돌문을 통과해야 문수봉 쪽으로 갈 수 있다.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비봉능선에서 가장 높은 문수봉(727m)은 비봉처럼 암릉길과 우회로로 갈라진다. 암릉길은 짜릿하고 경치가 빼어나지만 위험하다. 계속 쇠난간을 붙잡고 올라야 하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얼마나 위험한지 맨 위 정상은 출입금지다. 안전하게 우회로를 따르는 게 좋다. 비봉능선은 문수봉에서 끝나지만, 이후부터는 산성주능선이라는 이름으로 성곽을 따라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까지 이어진다.

문수봉 왼쪽의 우회를 택하면 처음 100m 정도는 평탄한 길이다. 하지만 곧 기나긴 바위 무더기 너덜오르막이 나타난다. 저 위를 쳐다보면 아찔할 정도로 가파르다. 중간중간 쉬면서 천천히 오르면 고갯마루에 위치한 청수동암문에 이른다. 이 문은 전략적 요충지인 북한산에 성곽을 축조하면서 설치한 8개의 암문(비상출입구) 중 하나로, 비봉에서 성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했다.

청수동암문을 넘어서면 북한산성 14개 성문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대남문이 위풍당당하다. 2층 망루에 올라서면 저 멀리 서울 시내가 아스라이 펼쳐진다. 산성길을 따라 흐르는 도심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는 색다른 경험을 전해준다. 눈앞에 펼쳐지는 거칠 것 없는 풍경은 산행의 피로는 물론이요, 마음에 쌓아두었던 스트레스마저도 한 방에 날려주는 기분이다.

하산길은 대남문을 통과해 구기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된다. 길이 급한 편이지만 숲이 울창하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이 쪽 이어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40여 분 내려오면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구기동에 다다른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7212번 버스를 타고 15개 정류장을 이동해 이북5도청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서울시청 → 광화문 → 경복궁역 → 세검정 → 신영삼거리 → 구기터널 앞 → 이북5도청.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적어 사설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를 원하는 사회

우리말을 문법에 맞추어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된다는 이야기는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말을 한다. 우리는 한국어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놀란다. 우리말이 얼마나 배우기 쉽고 체계적인 문자인가는 누구나 동의한다. 이토록 쉽고 체계적인 문자 덕분에 문맹률은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우리의 근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했다. 훈민정음 창제는 한때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 1위에 오를 정도로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많은 지식인들은 한글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민족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우리말을 지키고 연구했다. 한자·한문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해방 이후 우리말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일본어의 그림자를 우리말에서 걷어내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더니,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 언어생활 속에 영어가 깊이 스며들었다. 언론 매체나 도시의 간판을 보면 영어로 뒤덮여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사실이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교육계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자.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근래 RIS 사업을 받아왔다. RIS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NIS보다는 LIS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사업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교육부는 다시 RISE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LINC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어떤 대학은 LiFE, HiVE 사업지원, 고교-대학 연계 스마트 제조혁신 MTC 사업을 받기 위해 준비하거나 이미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는가. 혹시라도 주변에 대학 관계자가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시라. 실제로 이들 사업을 수주하거나 수행하는 담당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된 저 사업의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단어가 횡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영어가 얼마나 큰 권력인지 새삼 느낀다. 영어 단어를 온전히 써도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마당에 약자로 써놓으니 의미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RIS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약자로, 지역 혁신체계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근래 자주 언급하고 있는 RISE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의 약자인데,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를 뜻한다.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는 국가 단위의 혁신시스템, LIS(Local Innovation System)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중심이 된 효율적인 협력체계, MTC(Meister Training Center)는 마이스터 양성 센터 정도가 되겠다. LiFE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HiVE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의미한다. 도대체 무엇의 약자인지 인터넷을 뒤져도 잘 나오지 않는 영어 약어들이 곳곳에 횡행하고 있다. 이 나라 교육을 이끌고 있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양산해 내고 있으니 세종대왕께서 저승에서 통탄하실 만하다.

국어보다 영어를 더 중시하는 교육, 국어사전은 없어도 영어사전은 있는 환경, 우리말보다 영어를 몇 개 더 알면 으스대는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말 교육을 망치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 영어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4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Over There :
저 너머로의 여행
2023. 4. 3. - 4. 14.

작가 : 허필석 | 추천 : 박범계 의원실



Camouflaged scenery
2023. 4. 17. - 4. 28.

작가 : 홍시연 | 추천 : 진성준 의원실

김진표 국회의장,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공식방문,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 개최

3월 3일	• 여야, 3월 임시국회 본회의 23, 30일 열기로 합의
3월 6일	• 정부,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3월 8일	• 김진표 국회의장, 8일부터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공식방문
3월 9일	• 국민의힘 신임대표에 김기현 의원 선출 •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 • 김진표 국회의장,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미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무스타파 쉐네토크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복구지원, 양국 교역·인프라·투자 분야 등 논의
3월 13일	•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3월 14일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보완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즉각 폐기가 정답"이라고 밝혀 • 김진표 국회의장, 이탈리아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교황청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
3월 15일	•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생법안 처리를 부탁하며 격주 회동을 제안
3월 17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 3개 확정
3월 19일	• 국민의힘과 정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논란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3월 20일	•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예방을 받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당부 •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양곡관리법 합의 논의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뜻 밝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3월 21일	•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개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야당 단독으로 의결 • 정의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혀
3월 23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 김진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에 판결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 김진표 국회의장, 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을 만나 원전, 수소 분야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등을 당부
3월 28일	• 법제사법위원회,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3월 29일	• 법제사법위원회,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정리 윤성혜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국회방문객이 찍은 국회 사진 공모



주제 국회의 풍경

참가자격 국회를 방문한 사람 누구나

내용 사진과 촬영이유, 사진설명
• 국회의 풍경이나 국회를 찾은 방문객,
국회 실내 모습 등의 사진과 짧은 설명(2~3문장)

응모방법 • 휴대폰으로 촬영(촬영 날씨가 보이게)
• 사진 및 설명,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
(book@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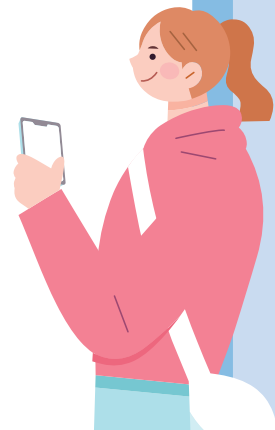
마감 매달 20일

규격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용량의 JPG, JPEG 파일형식
원본 창작사진 (디지털 합성 등 수정 변형불가)

시상 선정 시 원고료 10만 원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058)

- 매월 1편씩 선정하여 국회 월간지 국회보에 게재 예정.
-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선정 이후라도 표절, 타 공모전
입상작품 등 이유로 저작권 문제 발생시 선정 취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